

부동산 폭등기(2014~2023) 청년가구 재정변화 분석

- 20~30대 가구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변화를 중심으로

초록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부동산 가격 폭등시기 20~30대 가구의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주택가격이 급증하면서 합계출산율은 급락하고,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물론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는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순자산 증가는 미약했으며,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 상환 위험도 가중되고 있었다. 노동소득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가장 낮았으며, 소비 및 저축여력은 축소되고 있었다. 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드러난바, 교육·노동·주거 등 청년 삶 주요 현장에서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hanjin444@hanmail.com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전화: 02-2670-9224
- 팩스: 02-2670-9299
- 메일: kctuli2020@gmail.com

민주노동연구원의 발간물은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 | |
|--------------------------------------|----|
| ■ 요약 | 3 |
| 1. 서론 | 5 |
| 2. 청년 가구 자산 및 부채 실태 분석 | 8 |
| 1) 연령대별 자산 및 부채 변화 | 8 |
| 2) 청년 부채의 심각성; 개인 도산 및 다중채무 실태 | 14 |
| 3. 청년 가구 소득 및 소비 실태 분석 | 19 |
| 1) 연령대별 소득(노동소득 포함) 변화 | 19 |
| 2) 청년세대 노동실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 22 |
| 3) 연령대별 지출(소비·비소비) 변화 | 25 |
| 4. 결론 | 30 |
| ■ 참고문헌 | 32 |

요약

■ 주택가격 급등으로 출산율 하락과 청년세대 자산불평등 심화

- 서울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 2014년 4억 8,720만원에서 2022년 12억 7,380만원으로 2.6배 상승함.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주택가격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유례없는 초저출산으로 이어짐.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후 2016년까지 1.15(하단)~1.30명(상단) 사이의 박스권 내 움직임을 보였지만, 주택가격 상승이 본격화된 2017년 1.05명으로 추세를 이탈한 이후 2022년 0.78명까지 급락 추세가 이어짐.
- 주택가격 급등으로 세대 간 격차는 물론 청년세대 내 격차까지 자산불평등이 심화됨. 청년세대(39세 이하) 자산 5분위배율은 2017년 31.75배에서 2021년 35.27배로 상승했고, 40대 가구 대비 20대 순자산 비중은 2015년 27.86%에서 2022년 18.08%로 하락. 30대 또한 72.57%에서 63.82%로 하락함.

■ 청년가구 부채 급증, 순자산 증가는 취약, 부채상환 압력 및 위험 가중

- 2014년 대비 2023년 부채증가율은 청년가구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지만, 순자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취약했음. 청년세대의 '지급이자 및 상환액' 또한 급증했음.
 - 부채증가율은 전체 평균(51.81%) · 20대(217.89%) · 30대(115.27%)
 - 순자산증가율은 전체 평균(58.40%) · 20대(36.43%) · 30대(51.92%)
 - 지급이자 및 상환액 증가율은 전체 평균(51.69%) · 20대(151.18%) · 30대(113.46%)
- 9개년(2015~2023년)간 대출 유형별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청년가구(특히 20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부채를 늘렸음. 20대 가구 대출 유형별 연평균증가율은 담보대출(16.73%) · 신용대출(13.71%) · 신용카드대출(10.69%) 등이었고, 30대 가구는 담보대출(9.18%) · 신용대출(11.35%) · 신용카드대출(-1.03%) 등이었음.
- 청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개인도산 및 다중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파악 가능함. 고금리 추세와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정 여건이 취약한 청년가구(특히 20대)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됨.

■ 청년층 노동소득 비중 가장 높지만, 증가율은 취약, 소비·저축 여력 축소

- 2014년 대비 2023년 연령대별 소득증가율은 전체 평균(45.17%) · 20대(21.02%) · 30대(45.52%) · 40대(51.98%) 등으로 20대가 가장 취약함.
- 10년(2014~2023년) 평균 연령대별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전체 평균(64.37%) · 20대(82.50%) · 30대(79.30%) · 40대(70.85%) · 50대(67.81%) · 60세 이상(41.06%) 등으

로 청년세대의 노동소득 의존도가 가장 높았지만, 9개년(2015~2023년)간 노동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평균(4.26%) · 20대(1.87%) · 30대(4.16%) · 40대(5.54%) · 50대(5.39%) · 60세 이상(8.43%) 등으로 청년세대가 가장 취약했음.

- 청년세대 노동환경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득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도 연관되어 있음.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 ·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임

- 2014년 대비 2023년 소비증가율은 전체 평균(29.53%) · 20대(23.47%) · 30대(31.18%) 등으로 20대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10년(2014~2023년) 평균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보면 전체 평균(46.23%) · 20대(51.37%) · 30대(45.51%) · 40대(48.96%) · 50대(43.88%) · 60세 이상(46.65%) 등으로 나타난 바, 20대 가구는 소비를 줄인 것이 아니라 소비지출 여력이 없었다고 분석됨

- 2014년 대비 2023년 20대 저축가능액 증가율은 12.65%, 소득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 증가율 또한 -6.9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음. 그 결과 20대가 저축가능액으로 서울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소요기간도 2014년 39.5년에서 2023년 86.4년으로 대폭 늘어남.

■ 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가중, '교육 · 노동 · 주거' 등 청년 삶 주요 현장에서 더 공평한 기회 제공 노력 필요

- 주택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청년세대 내 자산불평등 확대는 소득 격차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의 대물림이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진입의 출발선부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있음. 우리 사회는 이미 교육 · 고용 · 주거 등 청년 삶의 주요 현장에서 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바, 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

- 청년세대 기회의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장하고 2)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3)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4)궁극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여 다주택자에게 매매차익에 상응하는 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1. 서론

KB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4년을 기점으로 폭등세를 연출했는데, 2015년 전년대비 4.2% 오르면서 추세변화를 보였고, 이후 2016년(12.2%) → 2017년(9.4%) → 2018년(19.8%) → 2019년(10.7%) → 2020년(15.5%) → 2021년(21.0%) → 2022년(10.3%) 등으로 급상승했다¹⁾. 연평균매매가를 기준하면, 2014년 4억 8,720만원 2022년 12억 7,380만원으로 2.6배나 올랐다. 해당 기간 중 최저 매매가격은 2014년 1월로 4억 8,396만원이었으며, 최고치는 2022년 11월 12억 8,220만원이었다. 주택가격 폭등의 이면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코로나19 시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금융완화 정책(저금리와 양적완화)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큰 몫을 담당했다.

주택가격 폭등세가 지속되고 가상화폐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영끌’과 ‘빚투’, ‘패닉 바잉(panic buying)’이라는 신조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조어는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희화화(戲畵化)하는 용어에 불과했는데, ‘부모찬스’없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주택가격에 대한 좌절과 분노 그리고 자포자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 불안정정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에 존재하는 장벽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다는 청년세대의 절망감이 ‘흙수저’, ‘헬조선’, ‘이생망’ 등의 신조어로 가감 없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좌절과 분노는 유례없는 초저출산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은 물론 국가 단위로 한정하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다. 이는 전세계 평균(2.3명), 인구 대체 수준의 출산율(2.1명), OECD 회원국 평균(38개국, 1.58명)에 크게 못 미치며,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이다²⁾. 2022년에는 0.78명으로 더욱 하락했다.

주택가격 급등이 출산율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림 1] 합계출산율 및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 추이를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1.15%(하단) ~1.30(상단) 사이에서 박스권³⁾내 움직임을 보였는데, 주택가격 상승이 본격화된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추세를 이탈한 이후, 2022년 0.78명까지 급락 추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⁴⁾ 결과에 따르면 해당시기 청년층(19~34세)의 결혼에 대한 태도 또한 금

1) KB주택가격 통계는 월단위로 제공되는 바, 연평균 매매가격은 해당연도 월별 평균매매가격(12개월 치)을 연평균 한 값으로, 2014(48,720만원), 2015(50,780만원), 2016(56,999만원), 2017(62,344만원), 2018(74,690만원), 2019(82,676만원), 2020(95,454만원), 2021(115,490만원), 2022(127,380만원), 2023(119,957만원) 등으로 산출되었다.

2) 한국은행(2023)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3) 합계출산율 데이터 시계열을 2001년까지 확장해도 2005년(1.09%)을 제외하고는 박스 권내 움직임을 보였다.

정적 인식이 2014년 49.7%에서 2022년 36.4%로 크게 줄었다. 2022년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33.7%)’과 ‘출산·양육 부담(11.0%)’ 그리고 ‘고용상태 불안정(10.2%)’ 등 경제적 이유가 컸다. 장기 시계에서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혼인을 하락이 주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이철희, 2019)를 고려하면 주택가격 급등이 혼인을 하락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합계출산율 및 서울아파트 연평균매매가 추이 /단위: 명, 만원



- 자료 : 통계청 및 KB부동산 통계(2008~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서울아파트 연평균 매매가는 당해연도 월평균 매매가를 연평균 한 값

한편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한국사회 일반의 불평등 가운데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은 소득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꼽았으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했다(김승연, 2021). 실물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가구 특성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변화가 자산 총량 변화의 결정적 요소임을 알 수 있는바, 주거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자산 불평등이 야기한 주거 불평등은 청년들이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게 함으로써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은 다시 결과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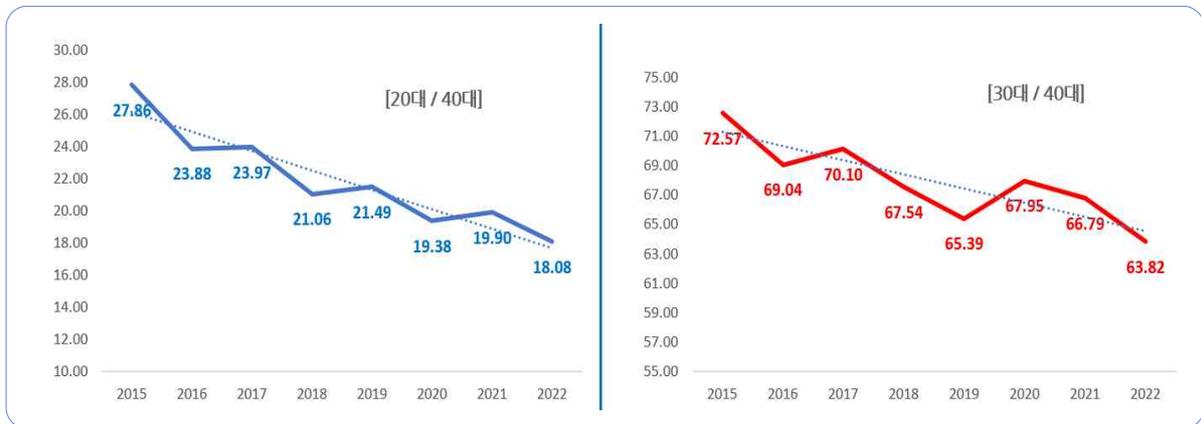
주택가격 급등으로 우리나라 청년층의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물론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 또한 심화시켰다. 먼저 세대 내 자산 격차를 보면, 청년(39세 이하) 하위 20% 가구 대비 상위 20%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2017

4) 통계청 보도자료 '사회변화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23.08.28)'. 통계청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씩 조사. 짝수해의 경우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부문을 조사하며, 홀수해의 경우는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부문을 조사.

년(31.75배) → 2019년(33.21배) → 2020년(35.20배) → 2021년(35.27배) 등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청년세대 내 자산격차의 확대는 소득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의 대물림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극복 불가능한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대 간 격차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택가격 급등 시기(2015~2022년) 순자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40대 가구 대비 청년 가구의 순자산 비중 추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9세 이하(이하 20대라 한다) 가구의 경우 40대 가구 대비 순자산 비중은 2015년 27.86%에서 2022년 18.08%로 크게 줄고 있는 양상이었다. 30대 가구 또한 72.57%에서 63.82%로 줄고 있는 등 세대 간 자산불평등 또한 심화되고 있었다.

[그림 2] 40대 가구 순자산 대비 청년가구 순자산 비중 /단위: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연도 3월말 기준

2014년 이후 본격화된 주택가격 급등과 더불어 청년층의 부채 또한 급증했는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금융긴축(금리인상과 양적긴축) 과정에서 원리금상환 압력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가격 상승과 원리금상환 압력은 일상의 어려움을 넘어 청년층을 절망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득격차는 노력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지만, 자산격차는 노력만으로는 도무지 해소할 수 없는 장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서울연구원 2021년 연구보고서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징과 과제’는 우리 사회가 ‘격차사회’를 넘어 ‘장벽사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품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5)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22.02.14.)’, 가톨릭평화신문(21.10.12) · 파이낸셜뉴스(22.05.16) 등 언론보도

이에 본 보고서는 주택가격 급등을 전후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가구(20~30대)의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변화 실태를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급등 시작 전해인 2014년을 기준시점으로 가장 최근 조사년도인 2023년을 비교시점으로, 두 시점 간의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기준시점이나 비교시점의 특정 데이터가 추세에서 벗어나 확대 또는 축소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계열자료(2014~2023년)를 통하여 9개년 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하여 증감 추세를 확인했다. 더불어 청년층의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전체 하에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자료 및 금융감독원 다중채무자 현황 등 검증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2. 청년층 자산 및 부채 실태 분석

1) 연령대별 자산 및 부채 변화

2014년 대비 2023년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변화를 보면, 전체 가구 평균 증가율은 57.21%였다. 20대 증가율은 67.05%(8,777만원 → 14,662만원)였고, 30대 증가율은 66.27%(23,226만원 → 38,617만원)로 청년가구 모두 전체가구 평균보다 높았다. 40대 가구 증가율은 69.67%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개년 간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전체(5.25%), 20대(6.07%), 30대(5.95%), 40대(6.20%), 50대(3.90%), 60대(5.60%) 등으로, 상기 두 시점 간의 변화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1]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변화(2014 vs 2023)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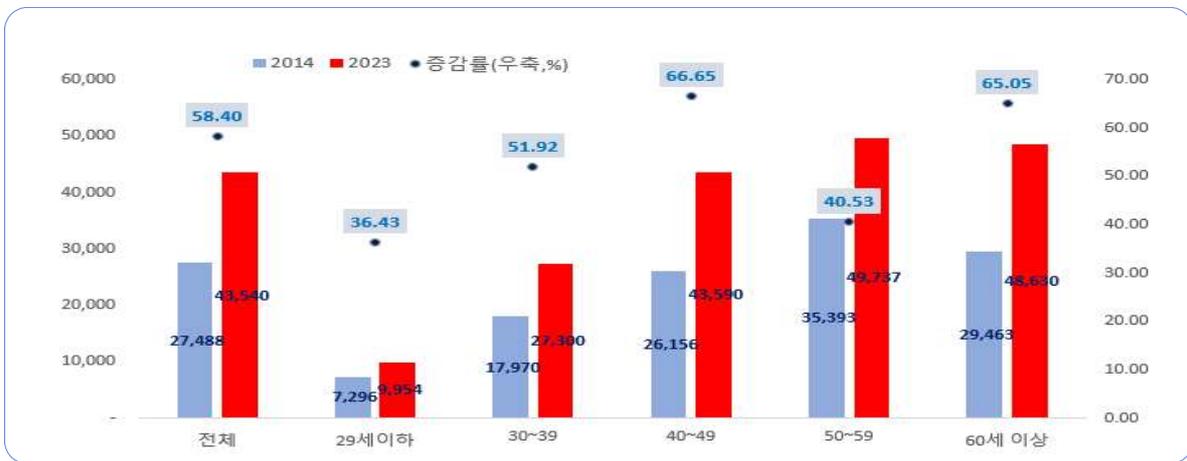
| 구분 | | 29세 이하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
| 2014 | 33,539 | 8,777 | 23,226 | 33,078 | 43,374 | 33,869 |
| 2023 | 52,727 | 14,662 | 38,617 | 56,122 | 60,452 | 54,836 |
| | 57.21 | 67.05 | 66.27 | 69.67 | 39.37 | 61.91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월말 기준

하지만 순자산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증가율이 전체가구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바, 청년가구의 자산 증가는 부채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순자산의 경우, 2014년 대

비 전체가구 평균 증가율(58.40%)과 비교할 때 20대 가구 증가율은 36.43%(7,296만원 → 9,954만원)로 현격하게 낮았으며, 30대 가구 또한 51.92%(17,970만원 → 27,300만원)로 낮았다. 40대는 66.65%의 증가율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 가구 또한 65.05%로 높게 나타났다. 순자산 9개년 간 연평균증가율은 전체(5.36%), 20대(3.88%), 30대(4.93%), 40대(6.03%), 50대(4.05%), 60대(5.83%)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변화(2014 vs 2023) /단위: 만원,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월말 기준

[그림 4]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변화(2014 vs 2023) /단위: 만원,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월말 기준

청년층의 낮은 순자산 증가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년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매우 높았

다. 2014년 대비 2023년 전체 평균증가율은 51.81%(6,051만원 → 9,186만원)인 반면, 20대 증가율은 217.89%(1,481만원 → 4,708만원)로 상상을 초월했고, 30대 또한 115.27%(5,257만원 → 11,317만원)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50대(34.24%)와 60대(40.85%)는 상대적으로 부채 증가가 적었다. 부채 규모로만 보면 2023년 기준 40대(12,531만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1,317만원), 50대(10,715만원), 60대(6,206만원), 20대(4,708만원)의 순이었다. 9개년 간 연평균증가율 또한 20대(14.83%), 30대(9.05%) 등으로 청년가구의 부채 급증세가 확인됐다. 전체가구 연평균증가율은 4.77%였으며, 40대(6.93%), 50대(3.36%), 60대(3.94%) 등이었다.

청년가구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전체가구 대비 청년가구 부채 비중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대 가구의 부채 비중은 2014년 24.48%에서 주택가격이 최고치를 보였던 2022년 54.68%로 크게 늘어났다. 30대 가구 부채 비중 또한 2014년 86.88%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최고치는 2021년(127.14%)이었으며, 2018년을 기점으로 전체가구 평균부채보다 30대 부채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림 5] 청년가구 부채 및 전체 가구 대비 비중(2014~2023) /단위: 만원,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월말 기준

9개년(2015~2023)간 20대의 금융부채 연평균증가율도 14.83%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임대보증금 연평균 증가율은 33.90%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채로서의 임대보증금이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월세 보증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대의 부동산 자산이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20대의 소득 여건을 고려하면 '부모 찬스'가 가능했던 청년들의 부동산 구입이나 상속 및 증여 또한 많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대 가구 금융부채 중 유형별 연평균증가율은 담보대출(15.18%) · 신용대출(16.73%) ·

신용카드대출(10.69%)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부채를 늘려왔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20대의 신용카드 관련 대출 증가율은 20대 가구재정의 취약성을 반증한다.

30대 가구 또한 연평균 금융부채 증가율은 9.84%로 타 연령대 가구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고 담보대출(9.18%)과 신용대출(11.35%) 모두 크게 늘었지만, 신용카드 관련 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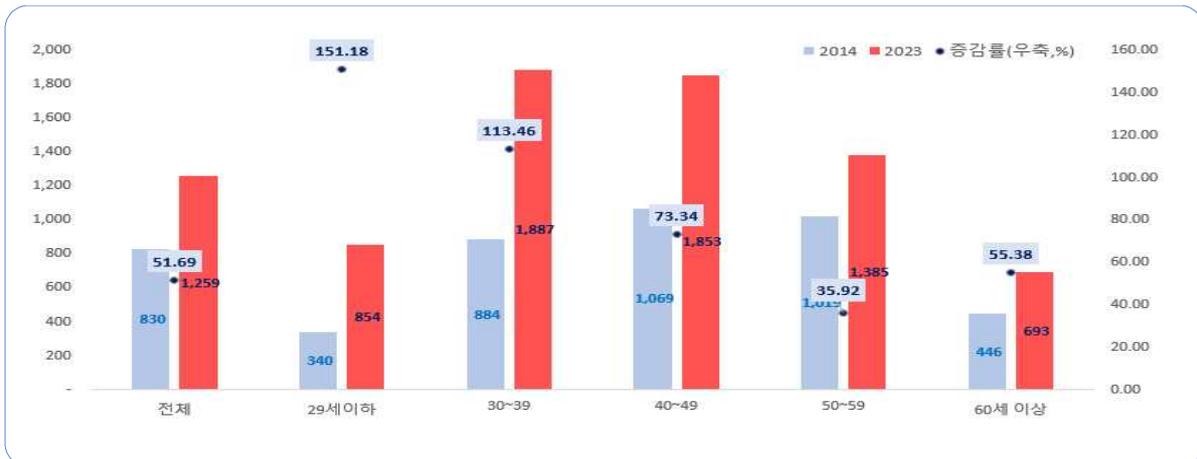
[표 2] 연령대별 9개년(2015~2023) 간 대출 유형별 연평균증가율 /단위: %

| 분 | 전체 | 29세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 금융부채 | 4.77 | 14.83 | 9.05 | 6.93 | 3.36 | 3.94 |
| [담보대출] | 5.06 | 16.73 | 9.18 | 6.80 | 3.66 | 5.13 |
| [신용대출] | 5.77 | 13.71 | 11.35 | 7.69 | 5.09 | 3.91 |
| [신용카드대출] | 1.80 | 10.69 | -1.03 | 2.77 | 5.32 | 10.06 |
| 임대보증금 | 2.88 | 33.90 | 5.74 | 6.32 | 1.61 | 1.83 |
| 지급이자 및 상환액 | 4.98 | 12.20 | 9.51 | 6.65 | 3.88 | 5.75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월말 기준, 지급이자 및 상환액은 조사 전년기준

[그림 6] 연령대별 '지급이자 및 상환액' 변화(2014 vs 2023) /단위: 만원,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지급이자 및 상환액은 조사 전년기준

20대의 취약한 소득 및 재정여건, 그리고 최근의 고금리 추세나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고려하면 청년 가구 중 20대 가구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황이라 분석된다. 9개년 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 연평균증가율도 20대가 12.20%로 30대(9.51%)를 상회했는데, 전체가구 연평균증가율은 4.98%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년가구의 부채상환 압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시점과 비교한 2023년 기준 ‘지급이자 및 상환액’ 또한 전체 가구 증가율은 51.69%에 머물렀지만, 20대(151.18%, 340만원 → 854만원)와 30대(113.46%, 884만원 → 1,887만원)는 급증했다. 50대는 35.92%로 가장 낮았고, 40대는 73.34%, 60세 이상은 55.38%였다.

[표 3]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구성 변화((2014 vs 2023) /단위: 만원, %

| 분 | 전체 | 29세이하 | 30~39 | 40~49 | 50~59 | 60세 이상 | |
|------|------|--------|-------|--------|--------|--------|--------|
| | 2014 | 9,013 | 5,568 | 9,135 | 10,351 | 11,262 | 5,965 |
| | 2023 | 12,587 | 8,706 | 14,572 | 14,746 | 14,713 | 9,862 |
| | 증감률 | 39.65 | 56.36 | 59.52 | 42.46 | 30.64 | 65.33 |
| 실물자산 | 2014 | 24,526 | 3,209 | 14,091 | 22,727 | 32,112 | 27,904 |
| | 2023 | 40,140 | 5,955 | 24,045 | 41,376 | 45,739 | 44,974 |
| | 증감률 | 63.66 | 85.57 | 70.64 | 82.06 | 42.44 | 61.17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월말 기준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가구의 자산 증가는 부채증가에 기인하는데, 상대적으로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표3]에서 보듯이 2014년 대비 2023년 청년가구의 실물자산 증가율은 20대(85.57%) · 30대(70.64%) 등으로, 금융자산 증가율 20대(56.36%) · 30대(59.5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 추세를 반영, 전체가구 평균증가율 또한 실물자산 증가율이 63.66%로 금융자산 증가율 39.65% 상회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규모 확대 효과는 기존에 보유자산이 많았던 고 연령대 가구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청년세대의 경우에는 부채 또는 ‘부모 찬스’에 의존한 신규 실물자산 투자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물자산 중 부동산에 국한하여 9개년(2015~2023) 간의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전체 가구 평균은 5.95%였으며, 20대(8.30%), 30대(6.55%), 40대(7.34%), 50대(4.46%) 60대(5.59%)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의 경우 2014년 이후 실물자산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타 연령층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20대의 경우 2023년 기준 금융자산 비중은 59.38%로 전체가구 평균 23.87%를 대폭 상회한다. 20대 가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30대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 또한 37.7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23년에는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청년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지만, 주택가격 급등시기(2014년~2022년) 부동산 자산 증가 효과로 청년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20대 가구는 2014년 63.44%에서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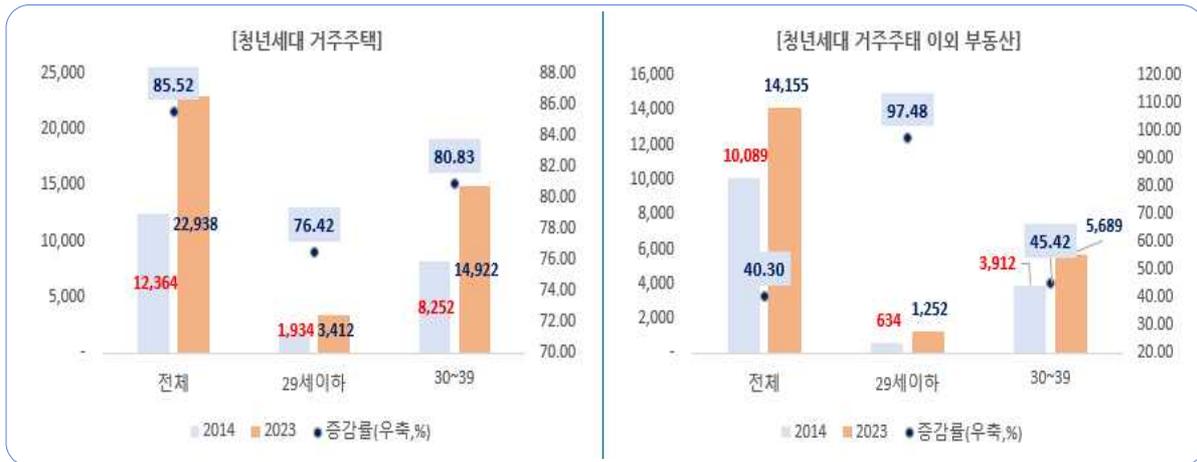
년 57.25%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며, 30대 가구는 2014년 39.33%에서 2022년 32.76%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림 7]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구성 및 청년가구 금융자산 비중 변화 /단위: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월말 기준

[그림 8] 청년가구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변화(2014 vs 2023) /단위: 만원,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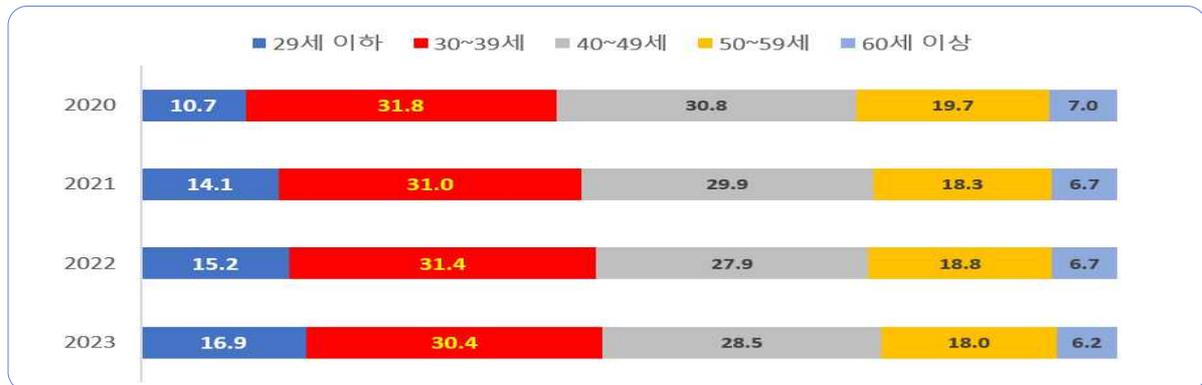
청년가구의 실물자산(부동산 등) 증가 관련하여 특이한 점 하나는 20대와 30대 가구 모두 상대적으로 거주주택보다는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이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기 보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전체가구의 거주주택 증가율은 기준시점 대비 85.52%에 달했지만, 상대적으로 기 보유 부동산 자산이 적은 20대(76.42%)와 30대(80.83%)는 전체 가구 평균에 못 미쳤다. 반면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20대

(97.48%)와 30대(45.42%) 가구 증가율이 전체가구(40.30%) 증가율을 상회했다. 20대와 30대 가구만 놓고 보면 20대 가구가 상대적으로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규모를 더 크게 늘렸음을 알 수 있다.

2) 청년 부채의 심각성 ; 개인도산 및 다중채무 실태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9세 이하 청년층의 개인회생⁶⁾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7%에 불과했던 29세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은 14.1%(2021년) → 15.2%(2022년) → 16.9%(2023년) 등으로 급증추세를 보였다.

[그림 9] 개인회생 신청 연령대별 비중 변화 /단위: %



- 자료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2022, 2023)

2023년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9,379건으로 전년(2022년, 14,826건) 대비 30.7% 증가했다.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278건으로 전년(2022년, 2,255건) 대비 45.4% 증가하면서 급증추세를 이어갔다. 2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20대의 경제활동 영역이 가상화폐, 주식 등으로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30대 청년층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비중이 2020년 31.8%에서 2023년 30.4%로 1.4%포인트 줄어들긴 했지만, 4년 동안 31%대를 전후로 소폭 변동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변화는

6)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중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신청가능하다.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없었다. 2023년의 경우 2022년 대비 비중이 소폭 줄긴 했지만, 2023년 신청건수는 5,893건으로 전년(4,658건) 대비 26.5%나 증가한바, 전 연령대에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개인파산 신청 연령대별 비중 변화 /단위: %

| | 29세 이하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
| 2020 | 1.48 | 6.90 | 18.94 | 33.57 | 39.11 |
| 2021 | 1.14 | 5.66 | 16.70 | 32.59 | 43.91 |
| 2022 | 1.30 | 5.04 | 14.75 | 30.83 | 48.08 |
| 2023 | 2.11 | 5.69 | 15.23 | 29.44 | 47.52 |

- 자료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2023)

개인파산⁷⁾의 경우 2023년 기준 신청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60세 이상(47.52%), 50대(29.44%), 40대(15.23%), 30대(5.69%), 20대(2.11%)의 순으로 고 연령층일수록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고 연령대에서 파산신청 비중이 높은 이유는 파산 자체가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청산함으로써 채무 변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신용등급에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를 재조정하여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환 기간 중에도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채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저 연령층일수록 파산이 아닌 회생을 신청한다.

그럼에도 2022년 대비 2023년 청년층의 파산신청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대는 1.30%에서 2.11%로 0.81%포인트 늘었고, 30대는 0.65%포인트(5.04→5.69%)가 늘었다. 서울회생법원의 보고서에는 파산 신청자 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통계월보 자료를 이용하여 파산신청자 수를 역산한 결과, 20대(539명 → 870명)는 331명이 늘었고, 30대(2,090명 → 2,346명)는 257명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파산 신청자는 41,463명이었고, 2023에는 41,239명으로 전년보다 -224명이 줄었지만 청년층 파산신청은 오히려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개인 파탄 원인을 보면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 또는 “생활비 지출증가” 등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는바, 대개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인한 소득감소가 원인이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주로 파탄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 하나는 이전에는 2%대에 불과했던 파탄원인 ‘투자

7) 개인파산·면책 제도 :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하며,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다.(서울회생법원)

(주식 등) 실패 또는 사기 피해'가 최근 2년(2022년 11.29%, 2023년 10.95%) 동안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표 5] 연도별 개인 파탄 원인 /단위: %, 중복체크

| 파탄 원인 | 2020 | 20221 | 2022 | 2023 |
|----------------------|-------|-------|-------|-------|
| 또는 근로소득 감소 | 48.88 | 54.90 | 48.92 | 48.42 |
| 생활비 지출 증가 | 48.88 | 51.78 | 51.10 | 46.79 |
|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 | 45.71 | 52.64 | 44.66 | 44.66 |
| 의료비 지출 증가 | 17.64 | 14.81 | 14.81 | 15.47 |
| 투자(주식 등) 실패 또는 사기 피해 | 2.40 | 2.07 | 11.29 | 10.95 |
| 보증채무 부담 | 11.04 | 10.56 | 10.42 | 10.05 |
| 교육비 지출 증가 | 2.81 | 2.41 | 2.25 | 2.70 |
| 재해, 사고 | 1.76 | 1.70 | 2.35 | 2.29 |
| 이혼 | 2.15 | 1.83 | 2.57 | 2.15 |
| 도박, 사치 등 낭비 | 0.39 | 0.32 | 0.41 | 0.70 |

- 자료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2023)

서울회생법원은 20대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증가와 관련하여 '20대의 경제활동 영역이 가상화폐, 주식 등으로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서울신문이 인천경찰청 발표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⁸⁾ 또한 청년세대 재정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765명 중 20대와 30대를 합산하면 59.5%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피해액은 5000만~1억원 사이가 76.4%에 달했다고 한다. 더불어 청년층에게는 이 돈이 미래를 위한 종자돈이었고 대부분이 빚이었기 때문에, 청년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설명했다⁹⁾.

[표 6]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대 및 금액 현황 /단위: %

| 연령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법인 |
|---------|--------|--------|-------|------|------|--------|------|
| | 21.1% | 38.4% | 20.2% | 9.2% | 6.1% | 1.7% | 3.3% |
| 피해자 금액별 | 5천~1억원 | 1억~2억원 | 2~3억원 | 5천이하 | | 3억원 이상 | |
| | 76.4% | 11.5% | 6.4% | 3.5% | | 2.2% | |

- 자료 : 인천경찰청, 서울신문 '2023 청년 부채 리포트(23.08.23)' 재인용

- 주 :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2022.07.25 ~ 2023.07.24.)

청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통계자료는 회수불능 학자금대출이다. 상당

8)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 이슈로 떠오른 계기는 2022년 불거진 '빌라왕 김대성' 사건이다. 김대성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임대인이었는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2022년 10월 돌연 사망했다. 피해자는 1천명을 상회하며, 피해액은 총 3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 서울신문 '2023 청년 부채 리포트(23.08.23)'

수 청년이 사회 진출도 하기 전부터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2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전년보다 1,676명 늘어난 41만1093명으로 나타났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을 전체 재학생 수로 나눈 학자금 대출 이용률도 12.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미상환학자금 대출도 크게 늘고 있는바, 2022년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가운데 회수 불능으로 처리한 금액은 274억 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47억3000만원), 2019년(51억 4900만원), 2020년(82억 2900만원), 2021년(118억 6200만원), 2022년(274억 8900만원) 등으로 급증추세를 이어갔다. 2022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은 4,778명으로 2018년(679명)보다 약 7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부담이 적지만, 다른 대출 때문에 상환부담이 높아진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갚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덧붙었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이유로는 개인회생(3,454명, 72.3%)과 파산(954명, 20.0%)이었다.¹⁰⁾

[그림 10] 학자금대출 회수불능 금액 및 상환 못한 이유 /단위: 백만원, %



- 자료 : 한국장학재단, 조선일보 '청년빈곤시대(2024.01.30.)' 재인용

청년층 특히 20대 다중채무자 및 채무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청년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다중채무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채무를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부실위험이 커지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29세 이하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8년 13.3% → 2019년 13.2% → 2020년 13.7% → 2021 15.5% → 2022.06 16.4% 등으로 2021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2년 6월말 기준 29세 이하 채무자는 약 236만 명인데 이중 38만 7천

10) 조선일보(2024.01.30.) "[청년빈곤시대]① 학자금 대출에 빚투, 결국 불법사채로... '빚 수령' 벼랑끝 2030"

명이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2022년 6월말 기준 다중채무자 비중은 25.6%로 2018년 비중과 동일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2022년 6월 기준 30대 채무자 수는 총 393만 4천명 이었으며, 이중 다중채무자는 1백만 6천명이었다.

[표 7] 다중채무자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분 | 29세 이하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전체 | |
|---------|----------|--------|--------|--------|--------|-------|--------|
| 2018.12 | 전체 | 2,271 | 4,058 | 4,976 | 4,570 | 3,308 | 19,183 |
| | 다중채무자 | 301 | 1,037 | 1,401 | 1,080 | 424 | 4,244 |
| | (비중 : %) | 13.3 | 25.6 | 28.2 | 23.6 | 12.8 | 22.1 |
| 2019.12 | 전체 | 2,307 | 3,988 | 4,938 | 4,639 | 3,527 | 19,399 |
| | 다중채무자 | 304 | 991 | 1,392 | 1,114 | 473 | 4,274 |
| | (비중 : %) | 13.2 | 24.8 | 28.2 | 24.0 | 13.4 | 22.0 |
| 2020.12 | 전체 | 2,335 | 3,967 | 4,920 | 4,667 | 3,749 | 19,638 |
| | 다중채무자 | 321 | 966 | 1,371 | 1,118 | 506 | 4,282 |
| | (비중 : %) | 13.7 | 24.4 | 27.9 | 23.9 | 13.5 | 21.8 |
| 2021.12 | 전체 | 2,373 | 3,982 | 4,901 | 4,719 | 3,957 | 19,931 |
| | 다중채무자 | 369 | 1,015 | 1,411 | 1,158 | 549 | 4,502 |
| | (비중 : %) | 15.5 | 25.5 | 28.8 | 24.5 | 13.9 | 22.6 |
| 2022.06 | 전체 | 2,360 | 3,934 | 4,878 | 4,713 | 4,015 | 19,900 |
| | 다중채무자 | 387 | 1,006 | 1,404 | 1,155 | 558 | 4,509 |
| | (비중 : %) | 16.4 | 25.6 | 28.8 | 24.5 | 13.9 | 22.7 |

- 자료 : 금융감독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22.09.13) 재인용

[그림 11] 연령대별 다중채무액 비교(2018.12 vs 2022.06) /단위: 억원, %



- 자료 : 금융감독원, 진선미의원 보도자료(22.09.13)에 의거 산출

다중채무액의 경우 29세 이하와 30대 모두 전체 평균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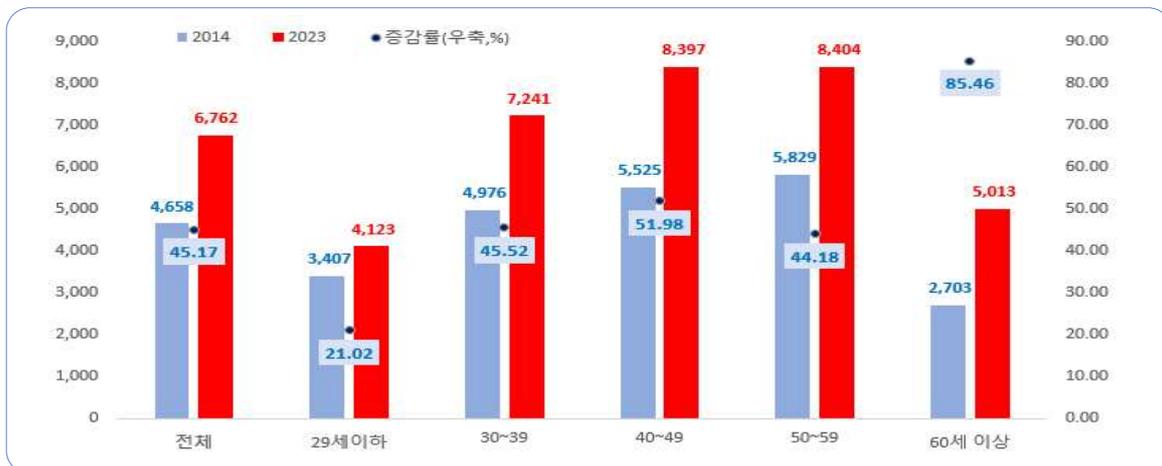
났다. 29세 이하의 경우 65.30%(14조 5529억 → 24조 554억원)로 급증했으며, 30대는 20대보다는 낮지만 전체 평균 16.52%를 상회하는 22.0%(110조 686억 → 134조 2,8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다중채무 상환불이행 위험은 가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청년 가구 소득 및 소비 실태 분석

1) 연령대별 소득(노동소득 포함) 변화

2014년 대비 2023년 연령대별 소득을 비교하면, 20대의 소득증가율이 현격하게 낮았다. 전체 평균 증가율은 45.17%(4,568만원 → 6,762만원)에 달했는데, 20대 증가율은 21.02%(3,407만원 → 4,123만원)에 불과했다. 30대 증가율은 45.52%(4,976만원 → 7,241만원)로 전체 평균과 유사했다. 60세 이상 가구의 증가율이 85.46%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1.98%) · 50대(44.18%) 등으로 나타났다. 9개년(2015~2023)간 연평균증가율 또한 전체(4.27%), 20대(2.24%), 30대(4.27%), 40대(4.80%), 50대(4.23%), 60세 이상(7.19%) 등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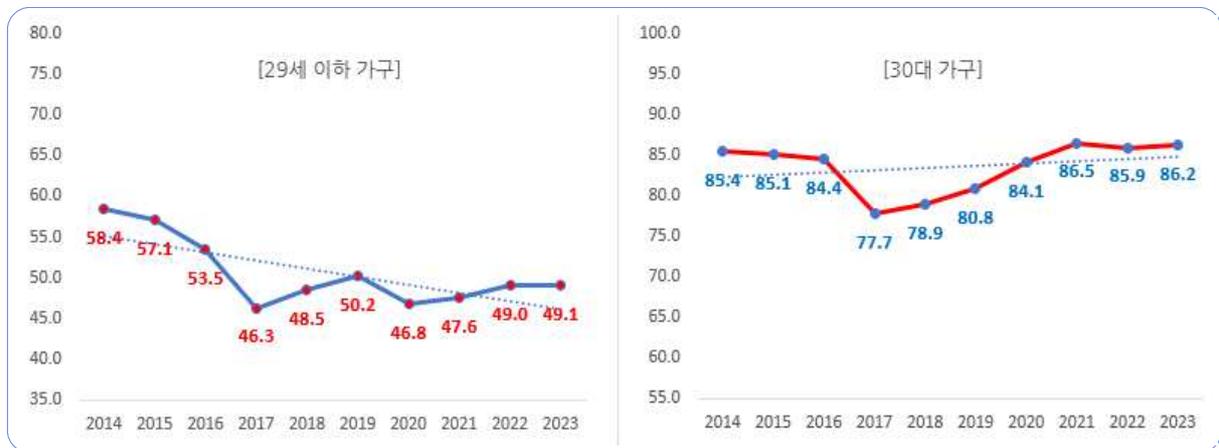
[그림 12]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변화(2014 vs 2023) /단위: 만원,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 및 지출은 조사 전년 기준

20대의 소득 여건이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은 50대 대비 20대 소득 비중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50대 가구 대비 비중을 본 이유는 50대 소득이 분석 기간 중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50대 가구 대비 20대 소득 비중은 2014년 58.4%에서 2023년 49.1%까지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30대 가구는 20대와는 다르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2014년 85.4%에서 2023년 86.02%로 소폭 증가했다.

[그림 13] 50대 가구 소득 대비 청년 가구 소득 비중 /단위: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 및 지출은 조사 전년 기준

2014년 대비 2023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중 노동소득¹¹⁾ 변화를 보면, 전체 가구 증가율은 45.12%(3,025만원→4,390만원)였다. 20대 가구 증가율은 15.44%(2,811만원→3,245만원)로 매우 낮았는데, 이는 현실의 노동시장 여건이 20대 청년층에게 비우호적이었음을 반증하는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가구의 노동소득 증가율은 44.13%(3,984만원→5,742만원)로 20대 가구보다는 높았지만, 전체 평균보다 적었고 40대(61.75%) · 50대(59.20) · 60세 이상(105.98%) 가구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9개년(2015~2023년)간의 노동소득 연평균증가율 또한 20대(1.87%) · 30대(4.16%) · 40대(5.54%) · 50대(5.39%) · 60세 이상(8.43%) · 전체 가구(4.26%)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소득 여건이 취약함을 드러냈다.

소득원천 중 노동소득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소득 변화를 보면, 2014년 대비 전체 가구 2023년 기준 사업소득 증가율은 4.06%(1,159만원→1,206만원)로 사실상 정체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분석 기간 중 자영업 분야 영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20대(32.62%, 423만원→561만원)와 30대(23.13%, 804만원→990

11) 가계금융복지 조사 상의 원 명칭은 근로소득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소득'으로 표기한다.

만원) 그리고 60세 이상(38.09%) 가구의 증가율이 40대(3.80%)와 50대(-3.57%) 가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가구(20~30세대)나 노년가구(60세 이상)가 이전 시기에 비해 자영업 관련 영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았다기보다는, 분석 기간 중 당해 연령대 가구의 자영업 관련 신규 진입이 많았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8] 가구주 연령대 · 소득원천별 가구 소득 변화(2014 vs 2023) /단위: 만원, %

| 분 | 소계 | 노동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소득 | |
|--------|-------|-------|--------|--------|------------|------------|--------|
| 2014 | 4,658 | 3,025 | 1,159 | 190 | 211 | 73 | |
| | 2023 | 6,762 | 4,390 | 1,206 | 436 | 625 | 106 |
| | 증감률 | 45.17 | 45.12 | 4.06 | 129.47 | 196.21 | 45.21 |
| 29세 이하 | 3,407 | 2,811 | 423 | 23 | 52 | 98 | |
| | 2023 | 4,123 | 3,245 | 561 | 62 | 155 | 99 |
| | 21.02 | 15.44 | 32.62 | 169.57 | 198.08 | 1.02 | |
| 30~39세 | 4,976 | 3,984 | 804 | 67 | 80 | 40 | |
| | 2023 | 7,241 | 5,742 | 990 | 154 | 305 | 50 |
| | 증감률 | 45.52 | 44.13 | 23.13 | 129.85 | 281.25 | 25.00 |
| 40~49세 | 5,525 | 3,841 | 1,473 | 117 | 64 | 31 | |
| | 2023 | 8,397 | 6,213 | 1,529 | 281 | 309 | 66 |
| | 증감률 | 51.98 | 61.75 | 3.80 | 140.17 | 382.81 | 112.90 |
| 50~59세 | 5,829 | 3,711 | 1,710 | 252 | 121 | 35 | |
| | 2023 | 8,404 | 5,908 | 1,649 | 447 | 346 | 54 |
| | 증감률 | 44.18 | 59.20 | -3.57 | 77.38 | 185.95 | 54.29 |
| 60세 이상 | 2,703 | 1,054 | 659 | 297 | 528 | 165 | |
| | 2023 | 5,013 | 2,171 | 910 | 644 | 1,111 | 177 |
| | 증감률 | 85.46 | 105.98 | 38.09 | 116.84 | 110.42 | 7.27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 및 지출은 조사 전년 기준

9개년(2015~2023년)간 사업소득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20대(9.28%) · 30대(2.62%) · 40대(0.54%) · 50대(-0.24%) · 60세 이상(3.87%) · 전체 가구 평균(0.52%) 등으로 나타난바, 2014년과 2023년 두 시점을 비교한 증가율과는 차이를 드러냈다. 30대 가구와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9개년 간 연평균증가율이 두 시점 간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20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소득이 노동소득에 비해 가구소득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에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뿐 아니라, 자영업 분야의 진출입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된다.

연령대별 소득 변화 중 특이한 점 하나는 60세 이상 노령 가구의 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졌

다는 사실이다. 2014년 대비 2023년 소득 증가율이 85.4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소득원천별 증가율로 비교해도 노동소득(105.98%) · 사업소득(38.09%) 모두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이전 시기에 비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년세대 노동환경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평균 비중을 보면, 20대(82.50%) · 30대(79.30%) 등으로 청년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40대(70.85%) · 50대(67.81%) · 60세 이상(41.06%) 등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동소득 비중이 낮아졌다. 전체 가구 평균 노동소득 비중은 64.37%였다.

반면 2015년부터 2023까지 9년간 연평균 노동소득증가율을 보면 노동소득 비중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20대(1.87%)와 30대(4.16%)의 연평균증가율은 전체 평균(4.26%)보다도 낮았고, 40대(5.54%) · 50대(5.39%) · 60세 이상(8.43%) 등 고 연령대 가구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결과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이 청년층에게 우호적이지 못함을 증명한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 내 불평등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림 14] 가구주 연령대별 노동소득 비중 및 증가율(2014~2023) /단위: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청년세대를 둘러싼 노동환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득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세대는 총소득 중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무엇보다 청년 고용률이 OECD 평균 고용률에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15~29세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46.6%로 OECD 평균 54.6%보다 매우 낮았다. 대학 진학이나 결혼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25~39세 고용률 또한 우리나라는 75.3%로 OECD 평균(87.4%) 대비 12.1%포인트가 낮은 실정이다.

[표 9] 청년층 고용률 추이 /단위: %

| 구 분 | 우리나라 | | | | | | OECD평균 |
|--------|------|------|------|------|------|------|--------|
| | 1995 | 2000 | 2010 | 2020 | 2021 | 2022 | 2022 |
| 15~29세 | 46.4 | 43.4 | 40.4 | 42.2 | 44.2 | 46.6 | 54.6 |
| 15~39세 | 58.1 | 55.9 | 54.9 | 56.9 | 58.0 | 60.3 | 65.3 |
| 25~39세 | 72.0 | 70.4 | 70.8 | 72.7 | 73.0 | 75.3 | 87.4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2023) 재인용

- 주 :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며,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에서 현역 군인은 제외.

29세 이하 청년층의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악화하였다. 15~29세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포인트 증가했다. 2010년 시점과 비교해도 비정규직이 7.9%포인트 늘어났다. 임금노동자 중 임시직 비중 또한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27.3%로 OECD 비중 11.3% 16.0%포인트나 높아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연령대별 비정규직 및 임시직 비중 추이 /단위: %

| 분 | 비정규직 비중 | | | | | 임금노동자 중 임시직 비중 | |
|--------|---------|------|------|------|------|----------------|----------|
| | 2003 | 2010 | 2020 | 2021 | 2022 | 한국(22) | OECD(22) |
| 15~29 | 31.8 | 33.5 | 39.9 | 42.1 | 41.4 | - | - |
| 30세 이상 | 32.9 | 33.0 | 35.6 | 37.6 | 36.7 | | |
| 전 연령 | 32.6 | 33.1 | 36.3 | 38.4 | 37.5 | 27.3 | 11.3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2023) 재인용

- 주1 :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계약직, 무기계약직 등),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파견, 용역, 특고)를 의미

- 주2 : OECD 임시직은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보다 좁은 개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전반적 환경도 청년층에게 비우호적인 상태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양질의 1차 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과 열악한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고 노동이동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2.06기준)’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정규직 대비 비

정규직 임금 수준은 72.9%였지만, 2022년에는 70.6%로 -2.3%포인트 주는 등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통계청 ‘산업별 ·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는 15,563,043명으로 82.63%의 압도적 비중을 보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272,672명으로 17.37%에 불과했다. 문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보다 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300인 이하 사업장의 임금 격차가 더 심하다는 사실이다. 2022년 조사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임금 수준을 100으로 한 상대 임금 수준을 보면,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65.3%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정규직은 57.6%(전년 대비 -1.0%포인트)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3.7%(전년 대비 -1.8%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다.

[그림 14]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2022년 기준) /단위 : %



- 자료 : 통계청 ‘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2.06기준)
- 주 :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상대 임금 수준 중 ()값은 2021년 대비 증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 · 고착화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였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 노동자가 대기업이나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일자리 이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은 2006년 11.7%에서 2021년 3.7%로 낮아졌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대기업 노동자로 이행할 확률 또한 5.3%에서 3.3%로 낮아졌다. 이는 청년들이 한번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가 될 경우, 당초 고용 형태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임금노동자 일자리 이행률 /단위: %, 전연령 기준

| | 2006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1 |
|--------|------|------|------|------|------|------|------|------|------|
| →정규 | 11.7 | 8.0 | 8.4 | 8.9 | 6.0 | 5.7 | 4.8 | 3.5 | 3.7 |
| 임시→상용 | 23.2 | 11.8 | 13.9 | 14.5 | 14.9 | 11.4 | 8.3 | 6.0 | 7.2 |
| 일용→상용 | 7.2 | 6.5 | 5.4 | 4.0 | 4.4 | 3.0 | 3.7 | 3.5 | 4.4 |
| 중소→대기업 | 5.3 | 4.2 | 4.0 | 3.3 | 2.3 | 2.5 | 2.9 | 2.2 | 3.3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은행(2023) 재인용

- 주 : 일자리 이행률은 전년도 고용지위 대비 변화 확률(일자리 1년 이행률)을 의미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 또한 2000년대 이후 소득 이동성의 저하 경향이 크게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소득이 낮은 그룹은 10년 후에도 소득의 증가가 거의 없지만, 초기 소득이 높은 그룹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파른 소득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 이동성의 저하가 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지위의 상승 가능성도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낮아졌다(김승호, 2021).

이처럼 최근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첫 진입을 어떤 경로로 하느냐가 이후의 생애 소득과 고용 지위를 결정하는 등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노동시장으로의 첫 진입은 교육에서의 불평등한 경쟁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기회의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등 개인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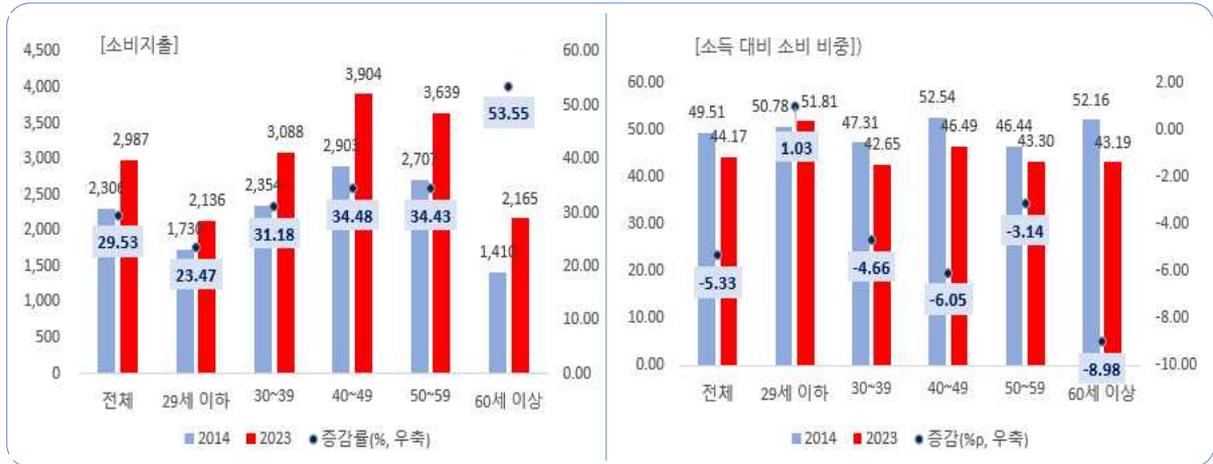
3) 연령대별 지출(소비·비소비) 변화

20대 청년층의 취약한 소득 여건은 소비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가구 평균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는 것처럼, 2014년 대비 2023년 20대 가구의 소비 증가율 또한 23.47%(1,730만원→2,136만원)로 전체 평균(29.53%)을 밑돌았다. 30대 소비 증가율은 31.18%(2,354만원→3,088만원)로 40대(34.48%)나 50대(34.43%)와 큰 편차는 없었다. 분석 기간 중 소득 증가율이 두드러졌던 60대 이상 가구는 소비 증가율도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비 지출액 변화만 놓고 보면 20대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비가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2014년 대비 2023년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보면 20대는 소비를 줄인 것이 아니라, 소비활동에 지출할 더 이상의 자금 여유가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 판단된다. 2014년과 2023년의 연령대별 소비 비중 변화를 보면, 20대 가구만 유일하게 소비 비중이 1.03포인트

(50.78→51.81%) 늘어났기 때문이다. 20대를 제외하면 30대(-4.66%포인트), 40대(-6.05%포인트), 50대(-3.14%포인트), 60대(-8.98%포인트) 등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비중이 줄었다. 전체 비중 또한 -5.33%포인트 줄었다.

[그림 15] 연령대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비중 변화(2014 vs 2023) /단위: 만원,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 및 지출은 조사 전년 기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령대별 소비 비중을 평균한 결과 또한 20대 가구의 비중이 5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 가구 평균은 46.23%였으며, 30대(45.51%), 40대(48.96%), 50대(43.88%), 60대(46.56%) 등이었다. 20대 청년 가구는 자의적으로 소비를 줄인 것이 아니라, 소비지출 여력이 없었을 뿐이었다.

[표 12] 10개년(2014~2023) 평균 연령대별 소득 대비 소비 비중 /단위: %

| 분 | 전체 | 29세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 | 46.23 | 51.37 | 45.51 | 48.96 | 43.88 | 46.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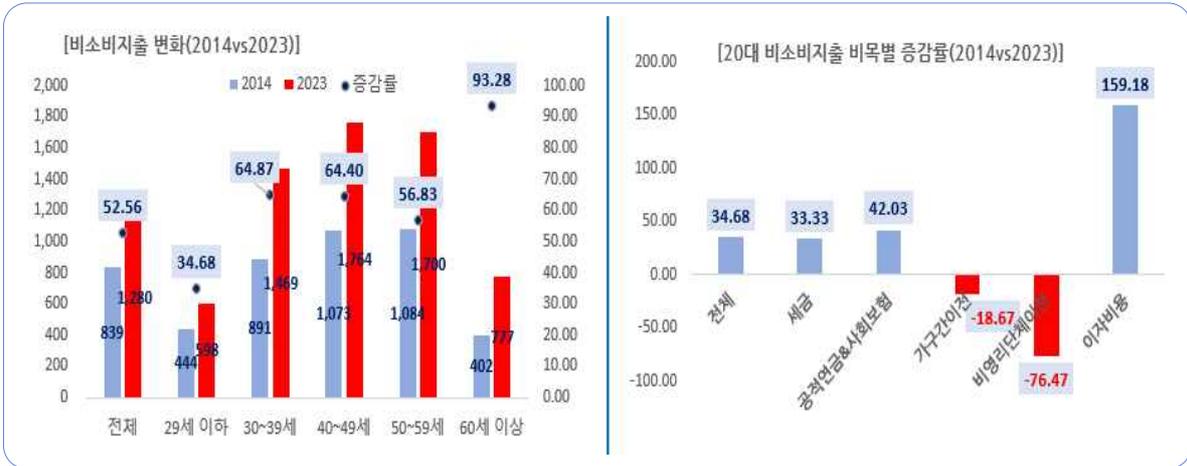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20대 가구의 소비 여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주된 요인은 무엇보다 불충분한 소득이겠지만, 이미 부채를 분석하면서 살펴봤듯이 원리금 상환 부담 또한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다. 청년 가구가 겪고 있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비목별비소비지출 분석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20대 가구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34.68%(444만원→598만원)로 가장 낮았지만, 비소비지출 중 이자비용 증가율은 159.1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비목별비소비지출 중 이자비용 항목만을 분리하여 2014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을 분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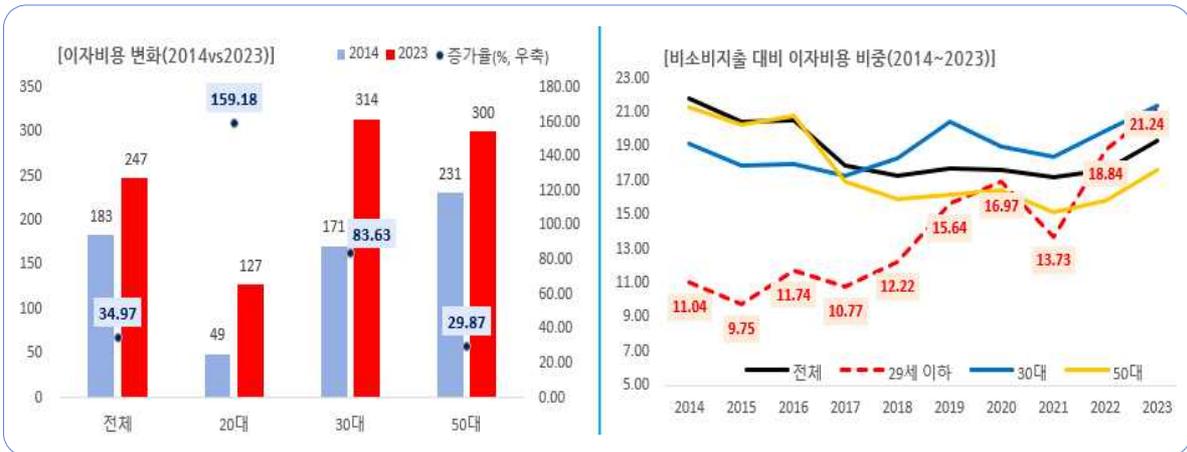
결과, 20대가 159.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또한 83.63%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가구 평균 증가율은 34.97%였고, 50대는 29.87%로 가장 낮았으며, 40대(43.46%)와 60대(43.52%) 등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16] 연령대별 비소비지출 & 20대 가구 비목별 변화(2014~2023) /단위: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 및 지출은 조사전년 기준

[그림 17] 연령대별 이자비용 & 이자비용/비소비지출(2014~2023) /단위: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 및 지출은 조사 전년 기준

2014년 이후 연령대별 비소비지출 대비 이자비용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 가구의 경우 2014년 21.81%에서 2021년 17.20%까지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통화긴축 시기인 2022년(17.64%) 이후 재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 가구는 전반

적으로 전체 가구 움직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30대나 20대 가구는 전혀 양상이 달랐는데, 30대 가구는 2018년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8.28~21.38)의 비중이 지속되었고, 20대의 경우에는 2014년 11.04%에서 2023년 21.24%까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청년세대 특히 20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표 13]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가능액 및 비중 변화 /단위: 만원, %

| 분 | 연 | 소득(A) | 소비지출(B) | 비소비지출(C) | 저축가능액 (D = A-B-C) | 저축가능액 비중 (D/A) |
|--------|------|-------|---------|----------|----------------------|-------------------|
| | 2014 | 4,658 | 2,306 | 839 | 1,513 | 32.48 |
| | 2023 | 6,762 | 2,987 | 1,280 | 2,495 | 36.90 |
| | 증감률 | 45.17 | 29.53 | 52.56 | 64.90 | 13.59 |
| 29세 이하 | 2014 | 3,407 | 1,730 | 444 | 1,233 | 36.19 |
| | 2023 | 4,123 | 2,136 | 598 | 1,389 | 33.69 |
| | 증감률 | 21.02 | 23.47 | 34.68 | 12.65 | -6.91 |
| 30~39세 | 2014 | 4,976 | 2,354 | 891 | 1,731 | 34.79 |
| | 2023 | 7,241 | 3,088 | 1,469 | 2,684 | 37.07 |
| | 증감률 | 45.52 | 31.18 | 64.87 | 55.05 | 6.55 |
| 40~49세 | 2014 | 5,525 | 2,903 | 1,073 | 1,549 | 28.04 |
| | 2023 | 8,397 | 3,904 | 1,764 | 2,729 | 32.50 |
| | 증감률 | 51.98 | 34.48 | 64.40 | 76.18 | 15.92 |
| 50~59 | 2014 | 5,829 | 2,707 | 1,084 | 2,038 | 34.96 |
| | 2023 | 8,404 | 3,639 | 1,700 | 3,065 | 36.47 |
| | 증감률 | 44.18 | 34.43 | 56.83 | 50.39 | 4.31 |
| 60세 이상 | 2014 | 2,703 | 1,410 | 402 | 891 | 32.96 |
| | 2023 | 5,013 | 2,165 | 777 | 2,071 | 41.31 |
| | 증감률 | 85.46 | 53.55 | 93.28 | 132.44 | 25.33 |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료 분석
- 주1 : 표기연도는 조사연도로, 소득 및 지출액은 조사 전년 기준
- 주2 : 저축가능액은 해당년도 소득액에서 소비지출액 및 비소비지출액을 차감한 값

가구소득에서 소비지출액과 비소비지출액을 차감한 2014년 대비 2023년 기준 저축가능액 변화를 보면, 청년 가구의 저축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전 가구 평균 증가율은 64.90%(1,513→2,495만원)였다. 20대 가구는 12.65%(1,233→1,389만원)의 증가율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고, 30대(55.05%)와 50대(50.39%)는 전 가구 평균을 하회하

고 있었다. 60대는 132.44%(891.→2,071만원)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76.18%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 소득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 변화 또한 청년 가구 재정 상태의 상대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은 2014년 32.48%에서 2023년 36.90%로 13.59%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6.91%(36.19→33.69%) 하락했고, 30대 증가율은 6.55%로 전 가구 평균을 밑돌았다.

[그림 18] 서울아파트 연평균 매매가 및 20대 가구 구입 소요기간(2014~2023)

/단위: %, 만원, 년



- 자료 : KB부동산 통계 및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1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은 조사 전년 기준
- 주2 : 서울아파트연평균 매매가격은 당해연도 월별 평균매매가격을 연평균한 값
- 주3 : 20대 가구 구입 소요기간(년) = 서울 아파트 연평균 매매가 / 당해연도 20대 가구 저축가능액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20대 가구의 저축가능액으로 서울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이나 ‘저축가능액’을 모아야 하는지 산출하였다. 2014년 기준 서울아파트 구매에 필요한 소요 기간은 39.5년을 필요로 했고, 2023년에는 86.4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2021년을 기준으로서는 92.8년간 저축가능액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이후 현실의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면, 사실상 청년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은 서로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 불평등 해소가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청년세대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 청년세대의 재정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 일반의 불평등 가운데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는 청년세대의 일반적 인식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세대 자산 불평등은 세대 간 격차뿐 아니라, 청년세대 내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자산 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은 주택가격 급등으로, 청년세대 내 자산 불평등 확대는 소득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의 대물림이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진입의 출발선부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동안 청년세대의 부채 규모 또한 급증했다. 하지만 청년세대 소득 여건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총소득 중 비중 이 가장 높은 노동소득 증가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악화하고 있었으며, 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일자리 이동 확률 또한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 · 고착화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였다. 그 결과 원리금 상환액이 급증하는 등 재정이 불안정해지면서, 개인 도산 및 다중채무자도 급증하고 있었다. 최근 회수불능 학자금 대출 및 대출자가 크게 늘고 있었고, 인천지역 사례로 볼 때 전세 사기의 주된 피해자 또한 20~30대 청년세대였다.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이 증가하면 사회구성원 다수를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게 하는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다시 결과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Brunori et al., 2013). 우리 사회 또한 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악순환 구조를 이미 드러내고 있다. 교육 · 고용 · 주거 등 청년이 마주하는 주요 삶의 현장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불평등의 원인이 청년세대의 노력이나 재능 부족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년세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당장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불평등을 한 순간에 없애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교육과 고용 그리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의 청년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이동성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청년세대 기회의 평등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이 불평등의 대물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생기고, 지출규모

가 학업성취는 물론 대학 진학과 노동시장 진출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교육비를 일방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전담시키는 건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청년층 상당수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사례¹²⁾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다.

둘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청년세대의 경우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지만, 반대로 노동소득 증가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률도 OECD 평균 대비 크게 부족한데다가,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약화하고 있었으며, 일자리의 이동성도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2021년 현재 39세 이하 청년세대 무주택 가구비율은 70.7%에 달하며, 1인 가구 비율 또한 52.8%로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¹³⁾.

넷째, 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고 다주택자에게 매매차익에 상응하는 증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토지국유화¹⁴⁾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주택은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단이기 때문이다.

12) 조선비즈 '청년빈곤시대⑦ (2024.01.30.)'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대학생이 학기 당 학교에 내는 돈은 약 300~400유로로 저렴하며, 이마저도 학생 교통비, 학생회비, 학생 복지비, 문화 지원비 등 주로 학생을 위한 항목들이라고 한다. 싱가포르 또한 성인이 됐을 때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형성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한 전(全)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구축하고 있어 교육과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한다.

13) 데이터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022) 및 주택소유 통계(2022), 고진수(2023) 재인용

14)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 토지를 국유화했다. 토지 국유화를 기반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18년 기준 싱가포르 시민권자 가운데 91%가 자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77.3%는 전월세 · 고시원 · 원룸에 거주하며, 청년층 63%가 월세로 살고 있다.(한경비즈니스 '집 걱정 없는 나나', 2020.09.02.)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2022),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합동
- 고진수(2023), 청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청년가구의 유형별,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 김승연·최광은·박민진(2021),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징과 과제, 서울연구원.
- 서울회생법원(2024), 2023년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2023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유경원(2023),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 이철희(2019),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한국경제의 분석.
- 청년재단(2022), 청년재단 청년정책 설문조사 <금융·재테크편> 결과보고서, 청년재단 정책기획팀.
- 통계청(2023), 사회변화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보도자료(2023.08.28).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2014~2023), 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 한국은행(2023),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중장기 심층연구.
- Brunori, P., F. H. G. Ferreira & V. Peragine, 2013, "Inequality of Opportunity,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Mobility: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